

해외부실채권은 외국환은행의 채권회수면제시점에 대손처리 가능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수출과 수입에 한정되었던 외국기업들과의 거래가 직접 · 간접투자 등으로 그 형태가 한층 다양화되고 빈도수도 크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외국기업과의 거래의 증가는 기업들의 이익을 증가시키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외화채권의 부실화의 증가라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큰 틀에서 보면 외국기업들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외화부실채권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실채권과 동일하게 세무처리하면 되는데, 외화부실채권의 세무처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외화채권도 국내발생 채권과 똑같이 대손반영함

현행 법인세법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범위를 열거규정 하면서 이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대손처리 및 손금산입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외화채권 등에 대한 차별적 규정은 없으므로 외화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수출대금 · 해외대여금 등의 외화채권도 국내에서 발생한 부실채권 등과 같이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해 회수불능 상태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손금으로 반영하면 된다.

보통 미수관련 소멸시효인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한다. 국세청에서는 해외매출채권도 국내채권과 동일하게 대손처리 한다고 유권해석을 하였는데, 관련예규는 다음과 같다.

♣ 법인세과-698, 2009.06.11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해외 매출채권의 경우에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채무자의 파산 등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은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해외 현지법원에 의한 청산절차의 종결시 대손처리 가능

외화 매출채권도 국내에서 발생된 매출채권과 마찬가지로 민법상의 단기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가 가능하지만, 채무를 지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자국에서 파산신청을 하고,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즉, 해외의 채무법인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단기소멸시효까지 기다렸다가 대손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하면 되는 것이다.

또한 해외 공판장의 회수불능확인서가 있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해당 회사에서 해외 채무법인의 부도·도주·행방불명 또는 못받을만한 불가항력적 사실을 조사한 뒤 해외 현지 한국영사의 확인서를 첨부하면 된다.

♣ 법인46012 - 1694, 1998. 6. 24

외국의 파산법에 의해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내국법인의 청산절차의 종결에 의하여 분배받을 잔여재산가액이 없음이 확정된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대여금 및 보증채무대위변제액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거 현지법인의 파산 또는 사업의 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게 되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한국은행으로부터 수출대금회수 면제 승인받은 경우도 대손처리 가능

해외 현지의 채무법인의 파산선고가 확정된 경우와 더불어,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해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 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 의무를 면제 받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하다.

수출대금에 대해 회수가 불가능한 불가항력 사유가 있는 경우, 한국은행 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채권회수면제 신청을 하고 그 사유가 적절하다고 승인받는 경우에도 대손처리가 가능한데, 면제승인을 받으면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바로 대손처리를 할 수 있다.

♣ 법인46012 - 3119, 97. 12. 3

비거주자에 대한 수출대금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외국환관리법」 제6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으로부터 수출대금의 회수 의무를 면제받은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제2항제8호(현재는 시행령 제62조제1항제7호임)에서 규정하는 대손금으로서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